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조기 정착 비결

‘예술’에 악센트... 문화수도 이끌 콘텐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문화수도 광주의 중요 콘텐츠로 재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 2005년 세계 디자인 발신지를 표방하며 디자인 비엔날레를 창설한지 4년만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상품성·기능성에 치우친 여느 디자인 전시회들과 다른 ‘예술성’을 꼽는다. 세계 최초의 디자인비엔날레를 내걸었지만 지난 1~2회 대회는 의욕 만큼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처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예술성을 부각시킨 고품격 전시로 방향을 튼 데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디자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올 가을만 해도 국내에서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필두로 ‘서울디자인올림픽’(10월9~29일), ‘디자인위크 2009 부산’(11월12일~15일) 등이 연이어 개막하기 때문이다.

◇충성 없는 디자인 전성 시대=선두 주자는 단연 광주이다. 광주는 세계 최

산업화 중점 둔 서울·부산에 경쟁 우위

한옥·국악 등 남도의 문화 디자인 호평

초로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했고,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도 특화된 전시로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신 디자인 유행을 전편일찍으로 보여 주던 과거의 디자인 행사에서 벗어나 한옥, 국악 등 남도의 문화원형에서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아낸 전시 구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산업 기반이 탄탄한 서울과 부산은 상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9일~29일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공원에서 종합 디자인 축제인 ‘서울디자인올림픽(SDO) 2009’을 연다. 광주보다 20억원이 많은 78억여 원을 들인 이번 행사는 디자인장터 등 30개 전시회와 아이디어(i-design) 놀이터 등 29개 페스티벌 등으로 펼쳐진다.

부산도 오는 11월12~15일 벡스코 전시장에서 60개 디자인 업체가 참여하는 ‘디자인위크 2009 부산’을 연다. 이들 업체가 200여개의 부스를 만들어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21명을 초대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예술성으로 차별화해야=좁은 전시 공간에 1천 벌의 한복을 전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30cm 내외의 작은 인형 1천 개에 1천 벌의 한복을 입혀 전시하는 기발한 발상(‘옷’ 섹션, 배형진 작 ‘천개의 인형’)으로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또 여타의 디자인 전시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남도의 소리와 한글도 멋진 디

자 작품으로 탈바꿈했다.

강진 백련사, 이장우가옥, 소쇄원 등지에서 연주된 가야금 산조를 녹음한 뒤 전시장에서 들려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99개의 국악기를 전시장에 매달아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국악기의 디자인 변천사를 보여줬다.

300여개의 천에 다양한 한글 서체로 글을 쓴 뒤 이를 매달아 한글의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글 숲’(서울여대 한글연구소 작)도 탄생시켰다.

또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비즈니스 큐레이터를 영입해 전시와 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매주 관련 기업을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등 차별된 산업화 전략도 마련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조인호 전시부장은 “디자인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만큼 7차례 비엔날레를 치른 노후유를 바탕으로 예술성에 무게를 둔 컨셉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안 한중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국인 학교 내국인 학생 비율 확대
부동산 구매 외국인 영주권 부여 검토

정부, 시·도경제협의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의 추가 확대와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관광업과 주류도매 등 일부 서비스업에도 일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또 ‘관광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투자를 막고 연계 개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사항과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재학생 수의 10% 내로 하위 신입생 등교율로부터 5년까지는 정원의 30%까지 허용토록 한 현행 내국인 학생 비율을 교육기관 설립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학생 부족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비영리 학교법인만으로 제한된 경제자유구역에도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영리법인 진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유(U)턴을 고려중인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장기임대사업단지의 경우 유턴기업에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특정지역을 아예 유턴기업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일정 금액(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무안기업도시에 추진중인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적정 시점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7천277억원 규모의 춘천호반 관광 조성사업을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며 ▲관광업,주류도매 분야 등에 외국인 고용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정 여건을 봐가며 농어촌 복지지역 전기 공급사업의 대상을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관광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업 심의 때 중복투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지역특구, 기업도시, 관광지, 관광벨트, 관광클러스터 등 부문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가칭 ‘관광개발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지원 때 우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동구는 2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각계 인사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광주시 동구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사회문제에 대두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도청별관, ‘전면 철거’ 또는 ‘완전 보존’

유인촌 장관 오늘 ‘10인 대책위’ 면담...철거안은 채택 안될 듯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밝힐 지 주목된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오후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와 면담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10인 대책위에 전달하고, 별관철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이 이미 “9월 중 최종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해 ‘원설계안’, ‘별관 원형보존’, ‘3분의 1 이상 존치안’, ‘5월의 문(별관 1.2층을 뺀 문을 만드는 것)’ 등 4개 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유 장관은 별도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10인대책위, 전당설계자인 우규승씨 등을 만나 별관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규승씨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대다수는 원설계안을 지지했고, 추진단은 원형 보존 외 대안에 대해서는 문화전당 사업 장기 차질을 들어 반대했다.

유 장관도 10인 대책위가 제시한 ‘3분의 1 존치안’과 ‘5월의 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원설계안과 별관존치안 중 한가지 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어느 쪽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추진단의 전언이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장고를 거듭해온 유 장관이 10인 대책위를 만나 별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최종 방침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옛 도청별관은 당초 전당 설계안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6월부터 5·18 단체들이 보존투쟁에 돌입해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문화전당 건립 공사도 1년 넘게 차질을 빚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요건 완화 30만명 혜택볼 듯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구직을 등록하고 2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서 연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실업자가 대상

이었으나, 이번에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의 실업자로 변경됐다.

공단 관계자는 “구직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에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18천800원)를 적용받으며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이들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공단은 새로 수혜자가 된 이들이 3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